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월 일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3년 월 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1. 주 문

“붙임” 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의 통합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청각장애학생은 일반학교에 2,335명 (80.3%), 청각장애학교에 560명(9.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2명(0.4%) 등 총 2,907명이 교육을 받고 있음.
-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교육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됨.
- 그러나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수어 사용을 못하는 교사가 임용되고, 수어 통역과 자막 등 기본적인 교육 편의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교사-학생 및 학생들 상호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힘들게 해 청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효과의 반감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실태조사, 수어의 정규과목 편성,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편 및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함.

□ 붙임: 건의안 1부

□ 보낼곳: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교육위원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교육부장관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교육 환경은 정부의 통합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각장애학교(특수학교)는 '90년대 26개교였던 것이 현재는 전국 10개 시·도 14개교로 감소되었습니다.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청각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2,335명(80.3%), 청각장애학교에 560명(9.3%),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2명(0.4%) 등 총 2,90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교육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화언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어 통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학교의 현실을 보면, 수어보다는 듣고 말하는 것만이 능력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간혀 당사자인 청각장애학생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교수·학습언어인 수어 사용을 못하는 교사를 임용하고 있고,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수어 통역과 자막 등 기본적인 교육 편의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사)한국농아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청각장애인 교육 현장은 농인의 고유성과 교육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울분을 토했고,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김완수 회장은 9월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생 시절에 교사가 수어가 아닌 구어와 수지한국어를 강요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했다”며, 현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어 사용에 필요한 교육 편의 제공에 소홀한 작금의 교육 환경은 교사-학생 및 학생들 상호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힘들게 해 청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효과의 반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중도중복장애 및 인공와우 수술 학생의 증가로 학교 현장은 학생 지도에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학교와 일반학교(통합교육)를 대상으로 청각장애학생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2001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영역별 전공 특수교사 양성 체계가 초·중·고 과정별 교사 배출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앞서 열거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 배치 및 양성을 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어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청각장애학생의 권리입니다. 이에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자막 등 교육 편의 제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청각장애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164만 충청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청각 장애학교와 일반학교(통합교육)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라

하나, 특수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하여 장애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하라.

하나,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